

의명에 숨어 특권 누리는 국회, 둘 중 하나는 포기하라

태평로



황대진
논설위원

우리 법엔 국회의원을 '약자' 취급하는 조항이 꽤 있다. 헌법의 불체포·면책특권은 불의(不義)한 권력자를 전제하고, 그로부터 의원을 보호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군사정권을 겪은 탓이다. 국회법도 권력자에게 밟힐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명, 즉 무기명투표를 보장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환부된 법률안 재투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대법원장 등 임명동의안,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안 투표 등이 그렇다. 여기에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무기명투표를 한다.

단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의 원로로서 대통령보다 자신의 공천권을 권이 대표가 더 무서울 것이다. 하지만 공천 불이익이 두려워 소신을 접는 의원이 있다면 그 또한 기록에 남겨야 한다. 평가는 유권자 몫이다.

국회법상 반드시 기명투표를 해야 하는 것도 있다. 헌법 개정안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나라의 권력 구조 같은 중요한 사안을 변경할 때 의원이 어떤 표결을 했는지 반드시 공개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개인 자격으로 투표

아무도 대통령 겁내지 않는데 시대착오적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 표결만이라도 선진국처럼 기명 투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자신이 뽑은 대표자가 어떤 표결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 의원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다.

민주당 혁신위가 2호 혁신안으로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를 제안했다. 국회법만 바꾸면 되는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지금도 각종 법안 투표는 전부 기명으로 한다. 비밀투표는 국회 표결이 아니라 선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또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험"이라는 지적도 있다. 불체포특권은 개헌하기 전에는 포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선진국도 대부분 불체포특권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용 방식은 차이가 크다. 우리 국회는 제헌의회부터 현재까지 체포동의안 가결률이 24%에 불과하다. 독일은 93%, 일본은 80%다.

더 중요한 차이는 표결 방식이다. 미국의회는 무기명 투표 제도 자체가 없다. 독일은 2021년 코로나 사태 때 정부 방역 마스크 조달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여당 원내 부대표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가결했다. 일본도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 외에는 모두 기명투표를 한다. 총리대신을 뽑을 때도 기명투표다.

국회의원은 약자가 아니다. '갑 중의 갑'이다. 연간 1억5000만원이 넘는 봉급을 받는다. 명절 휴가비만 830만원이다. 여기에 무료 KTX, 항공기 비즈니스석 등 186가지 특혜를 받는다고 한다. 그래 놓고 하는 일은 정쟁과 방탄, 입법 폭주와 잠수뿐이다. 불체포특권은 뇌물 등 개인 비리 방탄에, 면책특권은 가짜 뉴스 생산에만 쓰인다. 돈 봉투를 받은 의원 20명이 준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어떤 표를 던졌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체포동의안은 기명투표를 해야 한다. 의원이란 자신의 소신을 떳떳하게 밝히고, 유권자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만 결심하면 된다.

김준의 맛과 섬 [148]

임자도 황석어젓

"어린 조기가 아니다. 제대로 이름을 불러 달라." 황석어(황강달이)가 아마도 인간과 소통할 수 있다면 수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생선을 좀 안 나는 사람도 제대로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 목포나 신안이나 영광 등 황강달이가 많이 나는 곳에서는 강치, 강달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생김새를 보면 꼭 어린 참조기를 닮았지만, 황강달이는 머리에 닭 벼슬처럼 돋은 돌기가 있다. 겨울에는 남쪽 바다에서 지나다가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황해로 올라와 모래와 펄이 잘 섞인 곳을 찾는다. 좋아하는 것새우나 게 등 작은 갑각류가 서식하는 곳이자 산란할 장소이기 때문이다. 60여 년 전에는 그곳에 조기가 많았다. 이제 조기는 떠난 지 오래되었으니, 황석어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황석어는 참조기, 부세, 보구치(백조기), 수조기 등과 함께 농어목 민어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이다. 다른 민어과 어류와 달리 다 자란다고 해도 20센티미터가 넘지 않는다. 배는 황금색을 띤다. 오뉴월부터 칠팔월까지 민물이 드는 기수역으로 올라와 알을 낳는다. 임자도의 전장포, 비금도 원평, 영광 염산 등이 황강달이가 많이 오는 곳이다. 이들 지역은 인근에 천일염전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비금도는 '강달이 파시(고기가 한창 잡힐 때 바다 위에서 열리는 생선 시장)'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만큼 많이 잡혔다. 강달이는 작다고 무시당하고, 좌대에 오르지도 못하고, 그릇으로 담아 팔렸다. 지금도 다른 생선에 비해서 값이 저렴하지만 맛을 본 사람들이 옆에 조기가 있어도 황석어 철



이먼 먼저 구입한다.

황석어는 조기보다 작은 탓에 그물로도 작다. 지금은 자루그물을 갯골에 넣어 밀물과 썰물에 맞춰 하루에 네 번 그물을 올려 잡는다. 여섯 시간을 주기로 그물을 털고 세척과 선별, 천일염과 버무리를 반복해야 하니 눈을 붙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겠는가. 그래서 황석어가 무리를 지어 올라오는 계절에는 쪽잠을 자면서 조업을 한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 조기처럼 어느 날 발걸음을 뚝 끊는다면 여름철 짭짤한 황석어젓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李 장관 탄핵 전원 일치 기각, 거대 야당 폭주 여기서 멈춰야

헌법재판소는 25일 헬러윈 참석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직무 집행 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장관은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이 드러나지 않았다. 특별수사본부는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일반 국민들도 이 장관이 이 사고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 있을지는 몰라도 법법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탄핵이 기각될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다수 의석을 내세워 탄핵을 밀어붙였다.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 공세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을 감행한 시점은 대장동과 성남FC,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때였다. 이에 대한 맞불 놓기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탄핵까지 감행했다.

거대 야당의 국회 권력 남용은 국민 안전 및 행정의 공백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장관이 안전 총괄 책임을 못 했다고 탄핵했지만 거꾸로 5개월 넘게 안전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을 초래

했다. 폭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지만 담당 부처의 장관이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장관은 이날에야 비로소 업무에 복귀해 수해 현장으로 갔다.

그런데도 민주당 등 야 3당은 억지 탄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한마디 없이 "탄핵이 기각됐다고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다"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헬러윈 참석 특별법도 계속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미 경찰 수사에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고 탄핵 심판도 기각됐는데 무얼 더 조사하고 책임 지우겠다는 건가.

우리 사회에서 큰 사고란 되면 합리적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은 뒷전이고 음모론과 한풀이 정치판이 벌어지는 행태도 이제야 끝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난 사고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원인이 다 밝혀졌는데, 앓는 원인을 찾는다며 정치판만 벌이다가 정작 중요한 안전은 거꾸로 간 것이다. 국회 다수당이 사고 재발 방지책엔 관심 없고, 결박하면 탄핵을 앞세운 정치적 이용에만 골몰하니 달라지고 나아가는 것이 없다. 거대 야당의 폭주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민주당 보좌관 유출 혐의 군사 정보 700건, 정보위도 손 뻗었다니

군사기밀 유출 혐의 등으로 방첩 기관들의 내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전직 보좌관 A씨가 국방부와 합참 등 군 관련 기관들로부터 보고받거나 열람한 대외비 자료가 70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A씨는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정작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어디론가 유출한 것으로 의심돼 해고됐다. 그런 뒤에도 같은 당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들어가려고 면접을 봤다고 한다. 만약 내사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이 의원실, 저 의원실을 돌며 국가 안보에 관한 각종 자료를 계속 빼돌렸을 수 있다.

A씨는 해고 직전까지 국방위에서 활동하며 군 기관들에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과 같은 자료들을 요구했다. '김정은 참수부대'는 유사시 북한 지도부 제거를 위해 2017년 창설된 특전사 예하 여단을 가리킨다. 지금껏 정확한 부대 규모와 무기 현황이 공개된 적이 없다. 그런데 A씨는 국방부로부터 이 부대에 지급된 기관단총, 저격용 소총, 작전 차량, 특수작전용 무전기 등의 구체적인 수량을 보고받았다. 부대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A씨는 현무 미사일의 비공개 제원과 시험 발사 때 이뤄진 교

신 내용도 요구했다고 한다. 누구에게 넘기려고 했는가.

A씨는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는 2급 기밀도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메모나 촬영을 시도해 제지를 받았다고 한다.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에게 보고하거나 상임위원의 자료로 사용할 것도 아니면서 무리한 방법으로 자료를 얻으려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수사 당국은 A씨가 빼돌린 자료가 무엇인지, 어디로 흘러간 것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노당 활동을 했던 A씨는 국회에 오기 전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며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다수 썼다. 남편은 내란 선동으로 강제 해산된 통진당과 그 후신인 민중당에서 활동했고 2021년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사람이 2018년 국회에 들어와 5년간 활동했다. 국회 보좌진은 민감한 정부 기밀을 접할 수 있다. 그런 보좌진을 채용하는 우리 국회의 채용 시스템이 지나치게 느슨하다. 취급하는 정보에 걸맞은 수준의 신원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영상 시청

전례 없는 모두 마이너스, 수입이 더 줄어 플러스 된 성장률

올해 2분기 우리 경제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0.6% 성장했다.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하긴 했지만 민간 소비, 정부 지출, 건설·설비 투자,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전체 성장률은 마이너스였지만 정부 지출과 민간 소비 등 1~2개 항목은 플러스를 기록했었다. 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기 하지만 분명 건강장 경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2분기엔 원유·천연가스 등의 수요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 폭이 반도체 등 수출 감소분보다 컸던 것이 유일하게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준 요인이다.

수출이 부진할 때 성장을 지탱해야 하는 민간 소비는 한 분기만에 마이너스 0.1%로 돌아섰다. 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로 1분기에 0.6% 증가했지만, 민간의 소비 여력이 약해 지속적으로 경제를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 지출도 코로나와 독감 환자 수가 줄면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감소해 마이너스 1.9%를 기록했

다. 코로나 시기 과도할 만큼 풀었던 재정 지출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고, 1000조원을 넘는 국가 부채 때문에 앞으로도 재정을 풀기는 쉽지 않다. 민간의 설비 투자도 0.2% 감소해 전 분기 마이너스 5%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건설 투자도 줄었다. 내수를 뒷받침하는 기계·기밀·정부의 경제 활동이 모두 위축돼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기대하는 '상저하고' 형태로 경제가 살아나려면 수출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반도체 등 IT 경기가 얼마나 빨리 반등할지 불투명한 데다,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선택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우리 경제는 활로를 투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국내외 투자를 끌어들이자 본 총량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는 아시아 주요국 중 꼴찌다. 노동과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력 있는 세제를 만들고,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야 한다. 국내 기업들 투자를 국내로 돌릴 수 있는 적극적인 산업 정책도 필요하다.

이념·이권 교육 카르텔 특집②

전교조로 좌파 기르고, 학원으로 이권 챙겨... 교육, 점령됐다

586 좌파운동권, 사교육 시장도 장악...민주당과 연계 의혹도 교육계 뇌수 오장육부 깊숙이 침투...평도 먹고 알도 먹는 중

사교육 도둑 때 586-민주당, 연결돼 있나?

지난 10년간 130명 이상의 교사들이 학원으로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일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하면서 수익 원을 챙겼다. 수능 출제와 관련해 교사가 자신만의 정보(예컨대 수능 킬러 문항)를 학원에 전내고, 학원은 이를 판촉(販促)해 돈을 번다.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이어서 생겼다.

이 사교육계 도둑 때 정황을 윤석열 정부가 일방 타진할 기세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사교육 시장은 오래전부터 좌익 운동권이 장악해 왔다는 설이 분분하던 참이었다.

국민의 힘은 22일,

△ "586그룹이 사교육 시장을 독과점 했다"
△ "그들과 민주당 사이엔 상당한 교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말이 사실이면 [사교육 + 일부 교사들의 유착적 폐는 결국, 좌익 적폐의 한 커다란 명칭이었던 셈이다. "이래서 민주당이 자꾸 수능 정시율을 늘리자고 했나?"란 합리적 의심이 있다.

산적돼 된 수사파

학원과 교사들의 유착 유형을 몇 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한 사회과 교사는 M 학원 등에서 10년간 총 9억 3000만 원을

▲ 한 진학상담 교사는 I 학원 등에서 10년 동안 총 5억 9000만 원을
▲ 한 교사는 D 학원 등에서 4억 6000만 원을
▲ 또 한 교사는 I 학원 등에서 3억 6000만 원
▲ 또 다른 교사는 S 학원 등에서 3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定理, 이미 정해진 이치)를 재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주사파는 이제 이념세력(이러키보다는, 완전한 산적(山賊, banditry) 무리, 범죄 집단이란 사실이다.

예컨대 명색은 중국인의 자존을 위해 봉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순 무도한 도둑 때에 불과했던 청말(淸末)의 의화단(義和團) 같은 것.

도덕적 저항임을 자임하는 '운동'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 너절하고 △ 천하고 △ 저질적으로 타락했느냐 말이다.

당국은 '운동권 이권 카르텔'을 가차 없이 분쇄하라! 분쇄하라! 분쇄하라!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념·이권 교육 카르텔 특집 1>
학교가 혁명운동가 양성소나?...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학교를 혁명기(化)하고, 학생은 혁명예비군으로 키우려는 속셈 한국판 문화혁명, 한국판 홍위병 나올 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아(www.newdaily.co.kr) 7월 25일 게재 되었습니다.

